트럼프發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반도체·자동차'?

철강·IT·산업기계·화학·섬유·車 美 무역적자-韓 對美 흑자 큰 산업

수출 막히면 매출↓ 신용리스크↑

〈산업 별 미국 무역 규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점검〉 /자료 : CEIC, 무역협회, KB증권

산업분류	미국		한국		
	미국 무역적자 내 비중 (%)	무역적자 비율 (%)	대미 흑자 내 비중 (%)	대미 무역흑자 비율 (%)	2018년 수출증가율 (%)
농축산광물	-5.8	-76.7	-29.6	-46.1	26.3
화학제품	-1.9	-3.5	-5.8	-9.9	12.7
플라스틱	2.9	30.8	3.0	43.5	14.1
섬유	-1.9	-34.8	4.3	55.4	-3.8
철강	-2.4	-38.0	12.2	61.4	17.2
비철금속	-2.6	-37.6	-2.1	-25.2	24.6
산업기계	-16.1	-22.6	9.3	55.1	17.0
자동차	-20.6	-38.8	91.4	83.5	-9.3
전자(가전제외)	-18.9	-35.7	33.0	29.1	4.1
가전	-2.6	-20.8	9.0	76.6	-0.3

최근 미국의 트럼프발(發) 경고장이 날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경제와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걱정인 한국경제가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위협은 철강과 알루미늄이지만 반도체(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조사중)·자동차(한·미 FTA 개정 협상 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수출감소→실적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비용↑)'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을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시장에서는 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업종에서 신용(Credit)리스크가 터질 가능이 있다고 본다.

◆쌍두마차(IT·자동차), 美 제물될 경우 신용리스크↑

이미 시장에 알려진 철강(무역확장법 232조)과 세탁기(세이프가드) 이외에 미국이 노리는 산업은 다양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동시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큰 산업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산업 ▲미국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 (예:월풀)이 존재하는 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2~3개를 충족하는 산업은 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 등이다.

4일 통계자료 제공업체 CEIC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전자 (IT), 기계 부문에서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전체 적자의 약 58%가 발생했다. 이들 한국제품에 대한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도체 제품의 일종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도 조사 중이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폐지한 것은 2016년이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2015년 15억6000만달러에서 2017년 14억5000만달러로 15.9% 감소했다. 환율 변화나 한국산 자동차의 모델 경쟁력 약화가 통상마찰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화학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3억9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산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현재 '0%'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등 한국산 굴삭기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5% 내외로 추정된다. 캐터필러 등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한다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상압박이 실시된다면 IT, 제약 등에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의 제약업계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작업 (스페셜 301조 제안)을 진행 중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정부의 3%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다. 'AA'(S&P)인 국가신용등급도 흔들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69억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수출길이 막히면 매출이 줄고 신용리스크로 이어질게 뻔해서다.

◆분쟁 대상과 기간 확대 땐 기업 부담↑

한국경제 곳곳에서 신음이 들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었지만 유독 미국 시장 수출만 10% 가량 감소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다. 이미 글로벌 경제 저성장으로 위축된 세계교역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어서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 탓이다. 또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

크레딧 리스크 시장에 미칠 충격과 함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크레딧 시장 내 'AA급' 이상의 우량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 지역이 다각화돼 있거나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통상 압력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거나 분쟁기간이 길어진다면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내 집 마련 위해 '퇴직연금' 깬다

중도인출 비율 전년 比 42.8% 증가

주택구입·장기요양·임차보증 등 順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대비를 위한 '3층 연금'으로 불린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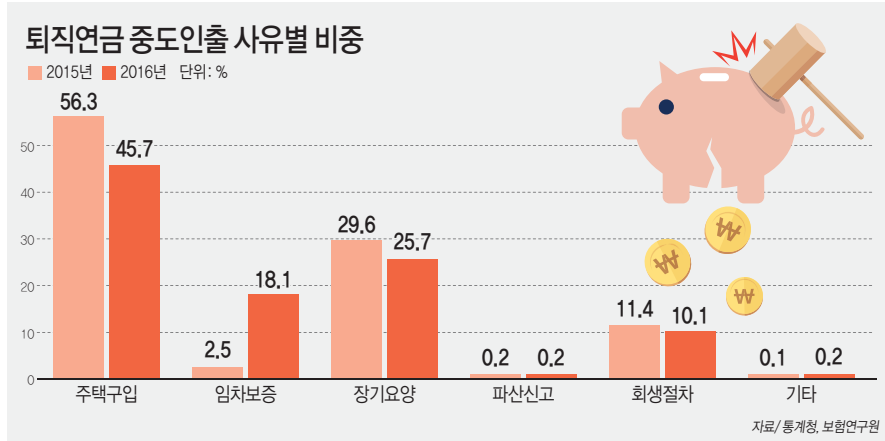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으로 인출 금액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가입자는 전년 대비 42.8%, 중도인출 금액은 27.7%로 대폭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택구입비 등 주거관련 비용 충당으로 63.8%가 인출됐다. 인출자 수 기준 주택구입 45.7%, 장기요양 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충당 18.1% 등 순이었다. 인출금액 총액 기준으론 주택구입 44.9%, 장기요양 36.2%, 임차보증 14.0% 등 순이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인출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에 대한 낮은 규제수준과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중도인출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도인출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 및 연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뤄진다.

또한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사망 및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구입비,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담보권 설정, 상계처리 등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오르다 마는 日 주택시장, 한국도 거래부진 탓 전철 밟나

한국은행 '日 주택시장 동향'

최근 일본 주택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주택수요 확대로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의 거래 부진 등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주택시장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 수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에 따르면 일본 주택가격은 지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약세를 이어오다 2013년 들어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조동애 한은 조사국 과장은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 및 관광업 활황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것도 도시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에 대응하고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빈집 증가, 거래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빈집은 높은 철거비용과 낮은 매각가격으로 잉여 주택의 처분이 용이치 않은데다 새집 선호 현상, 정부의 임대주택 장려 정책 등으로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됨에 따라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의 호조세에도 불구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부진한 점, 주택가치가 저평가되는 단독주택의 높은 비중, 주택매매 차익기대의 약화 등 투자목적의 거래여건이 미흡한 것도 주택시장의 활력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주생활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청년 주거환경 개선, 빈집 활용 및 기존주택 유통 촉진, 주거생활산업 활성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다 강화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동애 과장은 "일본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향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일본 사례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봉준 기자